



주간통일정세 2011-18(2011.04.25~05.0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창군 기념공연 관람...평양체류 추정(4/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창건 79주년을 맞아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있다고 보도
 - 이날 공연에서는 남성합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밀림이 설레인다', 남성 2중창 '보람찬 병사시절' 등의 작품을 선보임.
 - 공연 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김정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도 함께 함.
 -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 총정치국 부국장, 김명국 작전국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최부일 부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 당·군 고위간부들도 동석

- **카터 前대통령 일행 평양 도착(4/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11시7분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엘더스 대표단이 26일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
 - 디 엘더스 방북단에는 카터 전 대통령 외에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드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포함

- **北외무상, 카터 前대통령 일행 만나(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26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한 박외무상은 '디 엘더스' 대표단을 위한 연회도 개최했고, 디 엘더스 대표단이 방북시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공항에서 이들을 영접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천안함·연평도사건 책임 부인 안했다"(4/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북미 간 비공식 토론회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더글러스 팔 연구부회장은 RFA에 "북한 대표단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 측 대표단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함.
 - 그러나 팔 부회장은 북측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함.

- **방북 카터, 김영남 만나...김정일 면담 불투명(4/2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방북 이틀째인 27일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은 27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의례 방문한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엘더스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밝힘.
 - 또한 카터 전 대통령 등이 김 위원장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김영남 상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중앙통신은 전달함.
 -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 면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노동절 北 '강성대국 건설' 분발 촉구(5/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까지 한 해가 남았고 우리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 제껴야 한다"며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
 - 사설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 대진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드세고 과감하게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독려
 - 또한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 품모"라며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당부
 -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강성대국 건설에서 선군조선 근로자의 영웅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인민소비품 생산 증가와 식량 증산을 독려



- 중앙통신에 따르면 남북노동자대회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 중앙위원회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노래 '우리는 하나가 연주되는 가운데 통일기가 게양되었다고 함.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공훈국가합창단의 軍 창건 경축공연 관람(4/25, 중통)
 - 김정은, 리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우동측, 주규창, 김경옥·김원홍·김명국·정명도·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黨 중앙군사위원), 리명수(인민보안부장), 현철해(국방위 국장) 등과 함께 관람
- 김정일,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 김원일·수남소학교장 박광희 등에게 70돌 생일상 전달(4/28, 중통)

나. 경제

● 北, 금강산관광 독자 추진 '한시적 조치' 시사(4/26,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중혁 부위원장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설을 비워놓으면 다 망가져 금강산 관광을 우리 쪽에서라도 시작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물론 남측이 시작할 때까지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는 정기열 중국 칭화(淸華)대 초빙교수의 말을 인용해 지난 13일 평양에서 면담한 리 부위원장이 "남측의 금강산 관광은 앞으로도 현대아산이 맡아서 할 것이고 북측(을 통한 관광)에 관한 한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관련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곧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리 부위원장은 "정주영 명예회장 사망 10주년을 기념해 (김정일) 장군님이 친서도 전할 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남측) 당국이 승인하지 않아 못 만났다"며 "물론 현대 측은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함.
- 또한 리부위원장이 "우리와 미국 사이에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해 있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리측 농축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함.

● 캠프스키 "北과 합의한 대북사업 없다"(4/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 곳곳에 약 70개 호텔을 운영하는 캠프스키가 북한과 합의한 사업이 없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그러나 켐핀스키는 이메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새 사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대북투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RFA는 전함.
- **北 작년 9월 이후 국제특허 출원 전무(4/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한 차례도 국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 1993년 지문인식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처음 출원한 이래 작년 9월 발명가 4명이 연료를 아끼는 휘발유 엔진을 등록하는 등 지금까지 22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으나 이후엔 출원 기록이 없다고 보도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설...주권 행사"(4/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또한 특구에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고 전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에서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을 법적으로 보호 한다"며 "특구개발이 진척되는 것에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를 늘려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중앙통신에 밝힘.
- **"UNICEF 대북지원 예산 70% 늘려"(4/29,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천200만 달러였던 대북지원사업 예산을 2천40만 달러로 늘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방송에 의하면, UNICEF는 지난 3월 대북지원에 1천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지난달 북한의 식량실태를 조사한 뒤 식량지원을 권고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함.
 -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은 대북지원사업의 초점을 농촌지원에 맞춰 전체 예산 1천310만 달러 중 43%인 565만 달러를 농촌지원사업에 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또한 UNDP는 수확 이후의 곡물손실을 줄이는 사업을 위해 북한의 농업기술자들을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으로 연수를 보내는 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RFA는 전함.
- **WFP, 대북 긴급 식량지원 개시(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29일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35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힘.



- 에밀리아 카셀라 WFP 대변인은 북한 식량 부족과 관련해 "지난해 혹심한 겨울과 채소 작황 부진으로 주식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만성적 영양실조가 이미 널리 확산돼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뉴스는 보도
- WFP는 성명에서 대북 지원활동에 대해 "식량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장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平北 용천·동림군 등 전국 각지 농업근로자들의 4.22 현재 "벼모판 씨뿌리기 75% 상회, 지난해 대비 1.3배 이상 본격추진" 보도 (4/28, 중통)

다. 군사

● 北인민군 창건 79주년... '조용한' 휴일(4/24, 연합;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올해 인민군 창건일은 79주년으로 이른바 '꺾어지는 해'가 아니어서 별다른 행사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북한은 몇 일 전부터 각종 매체를 동원해 인민군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면서 선군정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장군님께서 인민군대 중대 강화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글을 실어 김정일 위원장의 군에 대한 영도력을 선전
- 조선중앙방송은 '세계 해전사의 기적이 창조되기까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해군 영도를 찬양
- 조선중앙TV는 공휴일인 25일 오전부터 종일방송을 내보내면서 영화 '젊은 참모장', '병사들의 어머니들이 보내는 축하', '공훈국가합창단 건군절 경축음악회' 등 온종일 군 창건일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 기타 (대내 군사)

- 당과 군대·국가의 책임일꾼들·우당위원장·당·무력·성·중앙기관 일꾼 등, 4.25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헌화(4/25, 중통)
 - 駐北 무관단도 화환과 꽃바구니 진정과 전국 각지의 열사들 동상과 인민군열사탑·열사릉·열사묘들에 헌화
-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청소년학생 등, 만수대언덕과 평양 시내 및 전국 각지 지방의 김일성동상에 꽃바구니 진정(4/25, 중통)
- 민대표단들, 육·해·공군부대들 방문 및 김정일이 보내준 선물 전달(4/25, 중통)

라. 사회·문화

● 北 건군절 군인특식 주민에게 떠맡겨(4/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열악한 식량사정 때문에 명절인 인민군 창건일(4·25)에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특별배급을 주민에게 떠맡겼다고 전함.
- RFA는 "당에서 공장·기업소별로 군부대를 하나씩 맡아 지원물자를 싣고 부대로 가 명절(인민군 창건일)을 함께 쇠라고 지시했다"며 "공장 간부들이 1인당 1천 원씩 돈을 걷어 군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는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을 인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인민군 창건절에 고깃국을 못 먹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에는 그나마 화확돼지가 장화신고 건너간 국물이라도 맛봤는데 올해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함경북도 9군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RFA는 보도
- 또한 "북한군 후방총국은 명절이면 속성 사료로 빨리 키워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화확돼지'라도 각 부대에 공급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를 집단 살처분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어려워져 대다수 군인이 명절 아침에 강냉이밥에 염장국으로 끼니를 떼웠다"고 전함.

● 1분기 중국 방문 北주민 35%↑...3만 명 육박(4/26, 미국의 소리(VOA))

-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2만8천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1천200명보다 35% 늘어났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7일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
- 북한 주민의 중국 방문을 목적별로 보면 공장이나 식당 등 취업이 1만4천60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회의 참석 또는 사업차 방문 6천명, 관광 700명, 친지방문 100명 이하였다.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는 7천300명이었다고 매체는 전함.
- VOA는 "중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



민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

● **북한인 미국방문 급증…민간교류는 활발(4/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북한 국적자가 작년 동기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6개월간 방미한 북한인은 총 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59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다"며 "이들은 대부분 관광비자인 B1, B2나 미공인된 정부기관과 그 대표에게 주어지는 G3비자로 입국했다. 방문목적은 관광, 학업, 투자 등이다"고 밝힘.
- 또한 RFA는 지난 2월과 3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주축으로 한 과학자 대표단과 북한 무역성 등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경제대표단이 잇따라 방미했다고 보도

● **'마약공장' 北접경 中지린, 마약범죄 급증(4/29, 길림신문;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린성 공안청이 지난 한해 1천529건의 마약 범죄를 적발해 1천416명을 검거하고 마약 1.3t을 압수했다고 길림신문이 보도
- 또한 연합뉴스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지린은 북한산 마약 유입이 용이한 데다 신장(新疆)에 기반을 둔 중국 최대 마약 밀매조직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옮겨오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마약 밀매지역으로 떠올랐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북한 당국이 독점해오던 마약 제조기술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최근 북한산 마약 유통이 크게 늘고 지린의 마약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인민보위사령부 소속 마약 타격대가 마약제조 공장이 있는 함흥 등에서 대대적인 마약 밀거래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고 함.

■ **기타 (사회문화)**

- 北 태권도시범단,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미국의 뉴욕 등 6개 도시 순회공연(2007년에 이어 2번째) 진행" 豫告(4/25, 조선신보)
- 제26차 중앙과학기술축전, 4.26 최태복(黨 비서)·전하철(내각부총리)·장철(국가과학원 원장)·김용진(교육총 위원장) 등 참가下 3대혁명전 시관에서 개막(4/26, 중통·중방)
- 제11차 5.21건축축전(5.3)과 건축미학토론회 진행 예정(4/26, 중통·중방)
- 北,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선전(4/26, 중통)
- 北, '김정일 선집 제8권 증보판(김정일의 1977.1~1979.3월까지의 연설, 담화 등 44건의 저작 수록) 출판(4/28,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EU, 北고려항공에 6년째 취항금지(4/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이 북한 고려항공을 국제 항공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6년 연속 '취항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은 "EU가 최근 발표한 '취항 제재 항공사 명단'에 북한의 고려항공이 6년째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고려항공은 지난해 '제한적 취항 허가를 받은 러시아산 새 항공기 2대(Tupolev-204) 이외의 항공기로는 EU 국가로 취항할 수 없다"고 설명
 - EU 관계자는 RFA에 "올해 들어 고려항공 측이 유럽 항공안전위원회에 안전도 개선 조치를 설명하며 취항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고려항공의 항공기들은 아직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항공기들이 EU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취항제재 해제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함.

- **北친선단체 대표 캐나다 방문…식량 논의(4/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대(對)캐나다 친선단체인 '조선-캐나다 협력기구'(KCCA) 대표가 지난달 캐나다를 방문해 식량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
 - 캐나다 개신교 단체인 메노나이트의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KCCA의 김철수 사무총장이 직원 1명을 데리고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이 단체의 캐나다지부를 방문했고, 수도 오타와에서 상하원 의원들도 만나 식량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방송은 전함.
 - 또한 RFA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메노나이트에 평양의 고등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교사 2명을 파견해달라고 최근 요청하기도 했다고 보도
 - 한편 캐나다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 10월 대북수출입의 원칙적 금지, 대북금융거래 및 기술이전 금지, 대북신규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상황

- **시진핑,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접견(4/29, 조선중앙통신)**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은 28일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대사를 접견, 양국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시 부주석이 지 대사에게 중조 간 선린우호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상호 고위급 인사의 교환방문 유지,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경제협력 심화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했



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이스라엘의 '가자지대' 공습 확대 및 유태인촌 건설 계획 등 對팔레스티나 정책 再次 비난(4/25, 중통·민주조선)
- 訪北 몽골인민당 대표단, 4.25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주체사상탑 등 참관 및 귀국(4/25, 중통)
- 北, 국제적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보고서'(4.14) 거론 "소말리아는 미국과 서방이 강요한 '다당제민주주의' 실시 후과로 극심한 혼란과 무정부상태에 있고 사회경제적 파국사태로 하여 해적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4/26, 중통·노동신문)
- 現 자본주의 경제위기 즉,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금융적 지배와 수탈체계의 심각한 붕괴과정"이라며 이의 영향을 막기 위해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 수립" 주장(4.28, 중통·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카터 "김정일, 이대통령에 정상회담 제안"(4/2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함.
- 카터 전대통령은 "오늘 오전 우리가 머무르고 있던 초대소를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초대소로 돌아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김 위원장으로부터의 개인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카터 방북단 일행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written message)를 읽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연합뉴스는 카터 전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6자회담 관련국들과 언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전제조건 없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보도

3. 대남정세

● 北 "동해표기 협력하자"..南 "협의하자"(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한 정부 당국자는 29일 "북측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지난 27일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앞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힘.
- 뉴스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이 오늘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5월 중순에 개성에서 동해 표기 관련 남북 협의를 하



자고 제의했다"며 전함.

- 특히 남측은 국제수로기구(IHO)의 실무그룹이 명칭 표기와 관련해 회원국의 공식 의견을 접수하는 마감시한이 5월2일인 만큼 이 기간 내에 북측이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IHO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뉴스는 보도

● 北, 백두산 이어 이번엔 '동해표기' 카드(5/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이번에는 '동해표기' 카드로 대화를 제의했으며 6자 회담으로 가려면 남북대화를 거쳐야 하는 북측이 남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17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동해표기 협력이라는 기발한 소재를 '발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에 의하면 북측은 지난 27일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명의로 우리 측 동북아역사재단에 팩스를 보내 동해 표기와 관련한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의
- 연합뉴스는 동해 수역 표기와 관련해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에 회원국이 의견을 피력하는 마감시한은 오는 5월2일로 이는 마감시한을 이미 파악하고 남측에 협력제의 타이밍을 치밀하게 잡은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시각을 전함.
-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측의 제안에는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연평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
- 그러나 북측의 의도가 어떻든 남북이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 학술 토론회와 현지답사에 합의한 것처럼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그럼에도 북측이 여전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태도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백두산 화산이나 동해 표기 등으로 대화 분위기를 지속하며 당국 간 본격적인 회담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며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조선반도 안보상황 불투명하고 불안정', '사과와 태도변화' 등) 관련 "파렴치한 생억지·악랄한 도발"이라며 "잇달은 대결망발은 저들이 처한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 말마적 발악"으로 비난(4/26, 중통·노동신문)
- 4.27재보선' 관련 "南 노동계가 반보수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고 있다"며 "현실은 이번 선거가 보수당국에 대한 南 노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심판장으로 되리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4/26, 중통·노동신문)
- 我軍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야전종합연습(4.25~29, 慶南 의령군 일대)과 對테러종합훈련(4.26~28 부산 해운대구 일대 등) 비난(4/26, 중방·중통)
- '南 4.27재보선'의 한나라당 패배 소식을 전하며 "反통일·反北대결 소동에 미쳐 날뛰는 現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비난(4/28, 중통·중방)
- '北 주민 4명 귀순' 관련 "인륜 도덕적 견지, 남북관계상 측면으로 보나 도저히 용화목과 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즉시송환' 持續 주장(4/28, 평방)
- 南 해군 3함대의 해상기동훈련(제주 추자도 일대/4.28)을 전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온 거레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라고 비난(4/28, 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카터 일행, 중국 외교부장 만나(4/25)

-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방북길에 오르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2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음.
- 카터 전 대통령과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이날 밤 베이징에서 양 부장을 면담했음. 카터 일행은 양 부장으로부터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최근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음.
- 최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 재개'의 3단계 방안을 내놓았던 중국의 양 부장은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엘더스가 남북한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디 엘더스 회원들은 이날 밤 양 부장과의 회동에서 다수의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함께 만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음.
- 카터 일행은 특히 북한과 당 대 당 외교를 맡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음. 동유럽과 아프리카를 순방한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을 수행했던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음.
-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낮 베이징 래플스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밤 중국의 외교장관과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우다웨이 "6자회담 조율하러 왔다"(4/26)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26일 오전 11시42분께 중화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음.
- 우다웨이 대표는 짙은 회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뒤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에 관해 중국과 한국의 입장을 조율하러 왔다"고 방한 목적을 밝혔음. 우 대표는 한국 정부에 북한의 남북 비핵화 회담 제안이나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전달할 계획이 있는냐는 질문에 "나는 중국 사람인데 북한의 입장을 왜 전달하겠느냐"고 반문했음.
- 그는 또 북한을 거쳐 오는 28일 한국을 방문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



통령을 비롯한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을 서울에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젯밤 베이징에서 이미 만났다"고 답했음.

● 한·중, 6자회담 재개 '3단계안' 의견 일치(4/26)

- 한·중 양국은 26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가는 3단계 접근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음. 북한도 남북 비핵화 회담을 우선으로 하는 3단계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 비핵화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 이 자리에서 우 대표는 최근의 북·중 협의결과를 전달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3단계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는 또 북한도 이 같은 3단계안에 대해 중국과 같이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당국자는 "우 대표가 북중 협의결과를 소개했다"면서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우 대표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6자회담에 조건 없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위 본부장은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도 남북대화가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대화에서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중국 측도 남북 간 대화가 그냥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이처럼 한·중이 3단계 재개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봄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조만간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조만간 비핵화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회동에서 우 대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남북 간에 어떻게 다룰 것 인지를 문의했으며 위 본부장은 "남북 간 대화가 성사돼야 할 것이고 성사되면 거기서 어떤 범위의 이슈를 다룰지 정해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음.
- 우 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한국이 바라는 남북대화가 이른 시일 안에 열리기를 바라고 지지한다. 북한과 미국이 적당한 시기에 대화를 진행하고 이것을 통해 6자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3단계 재개안 지지 입장을 확인했음.



- 그러나 양측은 회담에 이은 만찬에서는 북한 우리농농축프로그래(UEP)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위 본부장은 6자회담의 성과를 위해 UEP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만 우 대표는 6자회담에서 UEP를 논의하자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중국 측은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우리 측은 최근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사업 독점권을 취소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 이밖에 우 대표는 전날 베이징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카터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대화 재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다웨이 "남북대화 통해 6자회담 조속재개 희망"(4/26)

-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6일 "한국이 바라는 남북대화가 이른 시일 안에 열리기를 바라고 지지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적당한 시기에 대화를 진행하고 이것을 통해 6자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우다웨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6자회담이 중단된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열리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대화의 첫 단계가 남북대화냐는 질문에 "맞다. 남북대화다"며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우다웨이 대표는 이어 "6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자리이고 2005년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전면적 성과를 이뤄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카터 방북' 선긋기..北 직접 나서라>(4/26)

- 정부가 26일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 단순히 개인 차원의 방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카터 전대통령이 잠재적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나선 형국임.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굳이 제3자를 통해 우리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는 카터 방북에 대한 정부 내부의 정리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다시 말해 북한이 카터 전대통령이라는 제3자를 통해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이를 '진정성 있는' 북한의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정부 핵심당국자는 "서로 할 말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해야지 제3자를 통해서 한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음. 북한이 '우회로'를 타지 말고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을 통해 직접 천안함·연평



- 도 사건과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취지임.
-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우리 측과 여러 대화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북한 매체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북한이 카터 전대통령 카드를 악용해 현 국면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원로인사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은 특대형 모략극이고 연평도 포격은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임.
 - 여기에 과거 '평화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며 돌출행동을 했던 카터 전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확실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우리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됨. 카터 방북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김 위원장으로서 카터 전대통령 일행과의 면담을 의례적 수준에서 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직 국가수반 4인의 방북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모처럼의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음.
 - 외교가 일각에서는 카터 전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의외로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듣고 올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北, 천안함·연평도사건 책임 부인 안했다"(4/27)
-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북미 간 비공식 토론회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음.
 -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더글러스 팔 연구부회장은 RFA에 "북한 대표단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 측 대표단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밝혔음. 그러나 팔 부회장은 북측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한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대화를 이끌어내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겸 최설희 부국장, 외무성 신하 군축평화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 독일지부가 3월 말 독일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음.



● 中 "양자와 다자회담, 병행될 수 있어"(4/28)

- 중국은 28일 "남북 간, 북미 간 양자대화와 다자회담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상호 촉진하는 관계로 병행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입장을 내놨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음.
- 홍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회담 참가국들 간에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방안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양자와 다자 대화를 병행하자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그는 이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남북, 북미가 하루 빨리 접촉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유효한 틀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각 측과 함께 노력해 회담이 조기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카터 "北, 안전보장 없이 핵포기 안할 것"(4/28)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없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을 방문 중인 그는 27일 '디 엘더스(The Elders)'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곳 평양에서 바쁜 스케줄을 보내는 내내 일관되게 들은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전제조건 없이 미국, 한국 모두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음.
- 그는 하지만 "큰 난제는 그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없이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 북한이 카터 일행에게 안전보장 없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음을 시사했음.
- 그는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 평양에서의 얼마 안 되는 날들에 열심히 일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메시지를 갖고 미국과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 카터 "김정일, 이대통령에 정상회담 제안"(4/28)

-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의 2박3일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이 6자회담 관련국들과 언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전제조건 없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카터 전대통령 일행은 그러나 김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지는 못했음. 카터 전대통령은 "오늘 오전 우리가 머무르고 있던 초대소를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초대소로 돌아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김 위원장으로부터의 개인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이를 한국 지도자들에게 전달해달라는 것 이었다"고 밝혔음.
- 이 자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카터 방북단 일행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서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김 위원장의 친서(written message)를 읽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정상회담 제안 뿐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 카터 전대통령은 이어 "향후 상황이 호전돼 이 같은 제안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들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카터 전대통령은 "북한 군부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민간인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그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연관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이 없다"고 전제하고 "남북 간의 안보와 핵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전을 이루려면 모든 당사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융통성, 성실성,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한다"고 밝혔다.
-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카터 전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해 대북 식량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한다"면서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군사적·정치적 이유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식량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中 양자-다자회담 병행카드 관심>(4/28)

- 중국의 북핵 6자회담 해법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의 남북한 연쇄방문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해법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지적임.
- 우선 중국의 양자-다자회담 '병행 카드'에 눈길이 쏠림.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북미 간 양자대화 와 다자회담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상호 촉진하는 관계로 병행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밝혀 이를 언급했음.
-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방안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1단계 시작 후 2단계와 3단계를 병행할 수도 있다는 게 병행카드 해법의 골자로 보임.
- 중국은 1단계인 남북회담이 먼저 열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돼야 그 다음 수순이 가능하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병행카드 사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려졌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1단계가 종료된 후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가야 한다는 프로세스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 보인다"며 "중국의 병행카드를 순서를 무시한 채 1,2,3단계가 동시에 시작되도 좋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중국은 이달 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으로 북중 간에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북미접촉→6자회담'이라는 3단계 방안에 합의한 직후 이 같은 양자-다자 회담 병행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은 아울러 3단계 방안이 회담 참가국들 간에 호응을 얻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절차가 조속하게 시작되기를 바라는 입장인 듯함. 홍 대변인이 이날 "남북, 북미가 하루 빨리 접촉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한데서도 이런 기색이 역력함.
-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남북한이 목표와 시간표를 만들어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비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현대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의 쑨루(孫茹) 연구원은 이날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가해 측이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위기예방체제를 구축해 남북 간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끝으로 북한과 미국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게 되면 두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제3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음. 중국은 특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에 '역지사지'를 권유하는 분위기임.
- 북한의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와 관련,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통한 제재 카드보다는 6자회담에서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에는 다른 국가들이 왜 북한 UEP를 의혹의 눈길로 이를 바라보는 지를 직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임.
- 쑨 연구원이 기고에서 "북한은 과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준수는 물론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 3월 베를린에서의 북미 회동에서 미국에게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했고 미국은 이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중국은 아울러 한국과 미국에는 서방의 공격으로 리비아가 초토화되는 상황을 북한은 핵 억제력 보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기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美 "남북대화는 北진정성 보일 중요한 기회"(4/29)

- 미국은 28일 "남북대화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가시적



-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진정성을 증명할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대화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혀왔음.
 - 이 당국자는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옳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요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프로그램 관리와 모니터링 및 (식량지원 장소에 대한) 접근 조항이 있지 않고서는 식량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했음.
 - 오바마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카터 전 대통령은 순전히 사적인 차원에서 여행을 한 것"이라면서 "그는 공식적인 미 대표단과 함께 가지 않았고, 미 정부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도 갖고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美, 남북대화 지지속 南北행보 주시>(4/29)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8일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관련, 연합뉴스 기자에게 "남북대화는 북한이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불만을 해소할 적절한 포맷은 남북대화를 통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음.
-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런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남북대화 시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를 북한에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에는 남북회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음.
- 앞서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방한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대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하지만 "한국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 그동안 한미관계 조율시 최우선 원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사실상의 남북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완화하도록 오바마 정부가 압박을 넣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남북대화는 지지하되, 구체적인 정상회담 문제는 한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면서 "카터의 방북으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정부 인쪽에서는 카터의 방북 결과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는 북한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대부분 예상했던 것"이라는 등의 평가가 주류를 이뤘음. 일각에서는 "카터가 당초 우려대로 북한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음.
- 한편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의 김정일 면담 불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이미 카터 방북 전 상당한 가능성을 점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카터 일행이 속한 '디 엘더스'측과 뉴욕채널을 통한 사전 접촉에서 김정일과의 면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음.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가 카터 일행의 방북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도 낮게 봤던 것으로 전해졌음.

● 당국자 "김정일 메시지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4/29)

-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통해 대화 재개 메시지를 전달해온데 대해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북한의 보다 구체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너무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카터 일행을 통한 김 위원장의 우회적 메시지 전달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면서도 북한 최고 통치권자의 일정한 대화재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공식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보임.
- 그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 내용은 이미 이런저런 경로로 알고 있고 서로 입장에 따라 일이 되도록 알아본 바도 있지만 잘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면서 "나쁜 말은 아니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대화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가 언급한 '일이 잘되지 않았던 경우'는 2009년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비밀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 모색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교섭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됨.
- 그는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도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비슷한 말을 전했다"면서 "카터 전대통령과 우 대표에게 '고마운 말씀인데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 그는 북한 군부가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전날 카터 전대통령의 전언에 대해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유감 표시라는 것은 정교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中우다웨이 곧 평양행..6자 재개 조율(4/29)

-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29일 방한일정을 마치고 베이징(北京)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평양을 방문할 예정임.
- 우 대표는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평양 방문) 계획이 있으나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뒤 (평양방문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음.
- 그의 평양 방문은 북한에 방한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남북 비핵화 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6자회담 3단계 재개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추이가 주목됨.
- 우 대표는 이번 방한기간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평양 방문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북 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우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앞으로 비핵화에 관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을 표했다"면서 "우 대표가 서울에 이어 평양까지 순회방문을 마무리한다면 비핵화 회담 재개와 관련한 큰 틀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중국으로부터도 '외면' 당한 카터>(4/29)

- "카터 생각은 카터 생각일 뿐이죠."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의 방북결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했음. '평화 메신저'를 자임한 카터 일행의 방북이 미국과 한국, 북한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느낌임.
- 우다웨이 대표의 이 같은 '냉랭한' 반응은 이번 카터 방북에 대한 주변국들의 대응기조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애초부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민간차원의 방문으로 선을 그은 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조차 면담을 피한 카터의 메신저 역할에 대해 중국으로서도 특별히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임.
- 핵심 당사국들 사이에서조차 무게감이 실려 있지 않은 미국 원로정치인의 방북에 대해 '제3자'인 중국의 관료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임.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카터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우 대표 역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그러나 이 같은 반응의 이면에는 현재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 설정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남과 북 사이를 '중재'하며 6자회담 재개 흐름을 끌어가려는 중국으로서는 카터 전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분석임.
-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는 대화재개 국면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싶어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카터의 공 가로채기를 반길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카터 방북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과 관련해 북 중 간 사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 **美 "책임은 北정권에 있어..카터 주장 동의 안 해"(4/30)**

- 미국은 29일 북한 식량난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을 비판한 것을 반박했음.
- 제이컵 설리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카터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누가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책임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북한 정권 자체"라고 밝혔음.
- 그는 정치적 이유로 한미 양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전제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09년 3월 인도주의 요원들에게 북한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돌연 중단시킨 것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3가지 검토 요소들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북식량지원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결정될 문제임을 거듭 밝혔음.
- 그는 또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이후 미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방북 결과를 전했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그는 "궁극적으로 말이 아닌 행동들이 북한의 실제적인 진정성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면서 "행동을 통해 북한이 의미 있게 자신들의 노선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깊게 공유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음.
- 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남북 대화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진정성을 증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옳지 않다"면서 "북한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설리번 실장은 남북대화 전제조건 문제 등에서 한미 양국이 이견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고 일축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달 방한 기회에 깊은 대화가 있었고 '향후의 길'에 대한 공통 원칙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카터 일행, 전용기로 오늘 오전 방북(4/26)**

-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한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26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北京)을 떠나 평양으로 향함.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오전 중에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음. 디 엘더스 방북단에는 카터 전 대통령 이외에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드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포함됐음.

- 전직 국가수반모임인 디 엘더스는 방북에 앞서 비핵화를 통해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실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를 방문한다고 밝혀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됨.

● **北외무상, 카터 前대통령 일행 만나(4/26)**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26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중앙통신은 "외무상 박의춘은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엘더스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박 외무상은 이어 '디 엘더스' 대표단을 위한 연회도 개최했음.
- 카터 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 대표단은 이날 오전 순안공항을 통해 방북했으며,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공항에서 이들을 영접했음.

● **방북 카터, 김영남 만나...김정일 면담 불투명(4/27)**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방북 이틀째인 27일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은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한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엘더스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중앙통신은 카터 전 대통령 등이 김 위원장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 면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디 엘더스 대표단은 이날 평양외국어대학과 평안남도 간호원학교, 평성시 인민병원 등을 참관한 뒤 5·1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형요술(마술) 공연을 관람하고 연회를 열기도 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혔음.

● **"北, 세계최악 인권·종교 탄압 정권"〈美위원회〉(4/29)**

-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8일 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음.
- 북한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CPC로 연속 지정됐으며, 지난해는 국무부가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아 지정국 지위가 유지된 바 있음.
- USCIRF는 이날 발표한 '2011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인권과 종교자유 측면에서 개탄



- 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음.
- 보고서는 "차별과 억압, 체포, 고문은 물론 은밀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처형까지 이뤄지는 등 심각한 종교자유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송환되는 망명자들을 감금하고 학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음.
 -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리하는 종교단체나 극히 일부의 정부승인 가족교회만 허용하고 있을 뿐 다른 종교행위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어 USCIRF는 미 정부가 그동안 북핵 6자회담의 틀 내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으나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6자회담에서 종교자유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와 함께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 망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망명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중국이 지지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USCIRF는 이밖에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유엔의 다양한 기구와 특별절차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다자적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을 미 국무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은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가을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음.
 -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09년 1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CPC로 지정한 바 있음. CPC로 지정될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게 됨.
 - 이번에 북한과 함께 CPC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국가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이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11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음.

● "북한인 미국방문 급증...민간교류는 활발"(4/29)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북한 국적자가 작년 동기 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했다.
- 이 방송은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6개월간 방미한 북한인은 총 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59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다"며 "이들은 대부분 관광비자인 B1, B2나 미공인된 정부기관과 그 대표에게 주어지는 G3비자로 입국했다. 방문목적은 관광, 학업, 투자 등이다"고 밝혔음.
- 북한 국적자의 방미 증가는 북미관계 경색에도 양국 간 민간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줌. 지난 2월과 3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주축으로



한 과학자 대표단과 북한 무역성 등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경제대표단이 잇따라 방미했고 5월에는 태권도 대표단이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 美합참의장 "北,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태"(4/30)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9일 "북한군은 올해 식량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tough, complex situation)'"이라고 말했다.
- 멀린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NPB)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이같이 지적한 뒤 "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안정시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그는 "김 위원장이 도발을 계속하고, 아들에 대한 권력승계를 검토하면서 불안정, 오관, 긴장고조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북한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멀린 의장은 "김 위원장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해왔다"면서 "5년이나 10년 내에 핵 역량을 갖추려 할 것이고, 이는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안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의 주민들을 굶기고 있다"면서 "좋은 사람(good guy)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이밖에 멀린 의장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거기(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과의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미국이 개입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exactly)"라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北에 현금 원조한 적 없다"(4/26)

- 중국 정부 당국자가 26일 중국이 북한에 원조를 주면서 현금을 제공한 적은 없으며 물자와 기반시설 건설 등의 형태로 원조를 해 왔다고 밝혔다.
- 중국 상무부 웹 사이트에 실린 푸쯔잉(傅自應) 상무부 부부장의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 발간 기자회견 문답내용에 따르면 푸 부부장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금액과 수치를 밝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는 주로 공업과 농업 등의 생산 분야에 제공됐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중국은 북한의 농업생산 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와 경유를 원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푸 부부장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원조의 한 예로 평양의 지하철역을 들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는 물자와 건설 형태로 제공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첫 번째 대외원조는 북한에 제공된 것이라며 중



국과 북한은 이웃국가이고 오랜 교류의 역사와 전통적인 우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진핑,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접견(4/29)

- 중국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이 28일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시 부주석이 지 대사에게 중·조 간 선린우호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확고 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고위급 인사의 상호교환 방문 유지,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경제협력 심화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하리라는 희망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 시 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 아래 조선 인민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했음. 그러나 북한 측과 달리 중국 언론들은 지 대사의 시 부주석 접견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음.
- 지 대사는 최근 중국의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베이징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음. 그는 지난달 25일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지난 7일에는 리창춘(李長春)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각각 면담했음. 이 밖에도 지 대사는 지난달 하순부터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의 리충권(李從軍) 사장,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장옌농(張研農) 사장, 차우(蔡武) 문화부장도 만났음.
- 외교가에서는 최근 지 대사가 대사직을 갖고는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당·정 고위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마약공장' 北접경 中지린, 마약범죄 급증(4/29)

- '세계의 마약공장'으로 불리는 북한과 접해 있는 중국 지린(吉林)성의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린성 공안청이 지난 한해 1천529건의 마약 범죄를 적발해 1천416명을 검거하고 마약 1.3t을 압수했다고 길림신문이 29일 보도했음. 이는 1년 전인 2009년보다 마약 범죄는 62.1%, 마약사범은 45.7% 급증한 것임. 지난 한해 지린성 공안청에 적발된 마약 흡입사범도 1천429명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음.
-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지린은 북한산 마약 유입이 용이한 데다 신장(新疆)에 기반을 둔 중국 최대 마약 밀매조직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옮겨오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마약 밀매지역으로 떠올랐음.
- 지린의 마약 밀매조직들은 농민들에게 종자를 공급해 대마를 생산, 추출한 마약 원료를 북한에 넘겨준 뒤 일명 '얼음'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등 북한산 마약을 들여와 국내외에 유통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독점해오던 마약 제조기술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최근 북한



- 산 마약 유통이 크게 늘고 지린의 마약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지린에서 53명으로 조직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이 검거됐음. 이들은 북한에서 들여온 마약을 충칭(重慶)과 간쑤(甘肅) 등을 거쳐 신장으로 가져간 뒤 해외 마약 조직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해 3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당국이 북한인 5명이 포함된 국제 마약밀매조직을 검거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인민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1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북한 마약사범도 잇따라 검거됐음.
 -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지린성 사법당국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음. 지난해 6월 지린성 7개 인민법원이 국제 마약범죄에 연루된 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35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했음.
 - 북한 당국도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인민보위사령부 소속 마약 타격대가 마약제조 공장이 있는 함흥 등에서 대대적인 마약 밀거래 단속을 벌였다고 보도했음.

● 中, 日영사관 탈북자 3명 출국 허가(4/30)

- 중국이 이달 초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머물던 탈북자 5명 중 2명의 출국을 허가한 데 이어 나머지 3명도 조만간 출국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했다.
- 방송은 중국 내 탈북자를 지원하는 인권운동가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곧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남은 탈북자 3명의 출국을 허가할 예정으로 이들은 이르면 5월 첫 주에 일본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모자(母子)와 1명의 여성"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탈북자들이 중국 내 외국 공관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왔으나 지난 3일 "앞으로는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머물던 탈북 여성 2명의 출국을 허가했음.

라. 일·북 관계

● <北성금 빼놓은 일에 조총련 '불쾌'>(4/27)

- 일본 외무성의 대지진 성금 목록에서 북한이 빠진 것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가 단단히 화가 났음.
- 이 단체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가는 정 오는 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적으로 구원물자와 구원금을 보낸 대상을 모두 소개하면서도 유독 조선만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음.
- 조선신보는 "(일본과) 국교가 없는 대만도 포함돼 있는데 조선만 빠져



- 있다"며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 순수인도주의에 기초한 위문은 대상이 누구든 고맙게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음.
- 또 "하물며 저들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의 피해국에서 보내온 것이라면 더할 게 아닌가"라며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도 조선학생만 끝내 제외하고 있는 것도 이 나라(일본) 정치인, 관료들의 오만함과 도덕적 저열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맹비난했음.
 - 북한은 지난달 25일 허종만 조총련 부의장을 통해 일본적십자사에 성금 10만 달러를 보냈지만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대지진 지원물자 및 기부금 목록에서 북한을 쏙 빼놓았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음.
 - 당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이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했을 뿐 외무성에는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신보는 "도쿄신문은 1995년이나 2004년 지진 때도 같은 형식으로 조선에서 위문금을 보냈으니 일본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썼다. 지당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마. 기 타

● "WFP, 각국에 대북식량 지원 공식 호소"(4/27)

- 세계식량계획(WFP)이 이번 주 중으로 각국에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 호소(appeal)할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특히 지금까지 모금된 기금 2천만~3천만 달러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7일 "WFP가 이번 주 중으로 각국에 대북식량 지원을 정식으로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거나 설명회를 할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각국이 기부한 돈을 모아 일차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음.
- WFP는 올해 대북 식량지원 모금 목표를 약 5천만 달러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러시아 500만 달러 ▲스위스 396만 달러 ▲브라질 395만 달러 ▲캐나다 250만 달러 ▲인도 100만 달러 ▲노르웨이 88만 달러 ▲룩셈부르크 33만 달러 ▲남아공 14만 달러 등 모두 2천만~3천만 달러를 모금했음.
- WFP의 이 같은 식량지원 호소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의 방북 활동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 WFP는 지난달 북한 주민 61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북지원 규모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우리 정부는 대규모 식량지원보다는 북한의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허용한다는 '스마트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카터 일행이 전한 '북한의 현실'(4/28)>

- "북한의 식량 사정은 정말 끔찍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은 28일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음.
- 이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북한의 식량 부족. 지난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웠을 뿐 아니라 홍수와 구제역 등 잇따른 재해,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식량 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임.
-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이것은 북한 주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며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로빈슨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부는 지난 16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 배급 상황에 대한 폭넓은 모니터링과 아이들의 영양상태 측정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의 위기를 이해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음.
- 의학박사 출신인 그룬 브룬트란드 전 노르웨이 총리는 북한의 열악한 보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 브룬트란드 전 총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 병원에는 제대로 된 수도조차 없으며 필수 의약품은 30% 정도만이 제공되는 실정"이라면서 "북한 전체 아동의 3분의1 가량이 거의 성장이 멈춘 상태다. 영양 부족은 아이들의 뇌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이런 상황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외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북한 정부도 수도나 위생 시스템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UNICEF 대북지원 예산 70% 늘려"(4/29)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천200만 달러였던 대북지원사업 예산을 2천40만 달러로 늘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음. UNICEF는 최근 인도주의 활동보고서를 새로 펴내고 올해 대북사업에 2천40만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70% 늘어난 것임.
- UNICEF는 지난 3월 대북지원에 1천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지난달 북한의 식량실태를 조사한 뒤 식량지원을 권고하자 이같이 결정했음. 지원 대상도 440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늘었음.
- UNICEF는 5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8만8천400명이 중증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영양지원 사업에 570만 달러를 책정하기로 했음. 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제공 등 보건분야에 520만 달러, 상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위생분야에 782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임. 그러나 UNICEF는 지금껏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받은 50만 달러가 모금액의 전부



로 예산의 2%밖에 모으지 못했음.

-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은 대북지원사업의 초점을 농촌지원에 맞춰 전체 예산 1천310만 달러 중 43%인 565만 달러를 농촌지원 사업에 쓰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UNDP는 강원도 안변군과 황해남도 장연군 등에 태양열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평안남도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에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또 UNDP는 수확 이후의 곡물손실을 줄이는 사업을 위해 북한의 농업기술자들을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으로 연수를 보내는 사업도 검토 중임.

● < WFP 식량지원..北의 모니터링 수용이 결정적 >(4/30)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29일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개시하게 된 데는 악화되는 식량 상황에 다급해진 북한이 방침을 바꿔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요구를 수용한 것이 결정적이었음.
- WFP는 이날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35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지원된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동안 지원될 식량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가 넘음.
- WFP는 춘궁기인 5월부터 7월 사이에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는 10월 추수가 끝난 뒤에도 지원이 필요한 그룹을 선정해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할 방침임. 공급될 식량은 필수 곡물과 함께 옥수수와 콩, 쌀을 섞어 만든 우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비스킷 등임.
- 특히 WFP는 북한 정부의 동의하에 매달 한 차례씩 북한 내 400여 개 지역에 직원들을 보내 식량지원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WFP는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하루 전에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점검 작업에 나서는 직원의 20%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으로 채우기로 했음. 또 농촌 지역의 장마당에서 이뤄지는 물물교환 등 식량 거래 실태도 수시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음.
- WFP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활동 과정에서 식량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장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가 '모니터링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국제기구의 투명성 보장 요구를 수용한 것은 그만큼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임.
-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제네바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기존 방침을 바꿔 식량지원 상황에 대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WFP의 긴급 지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북한 식량난의 원인은 구조적으로 워낙 복잡적이고 만성화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전혀 미치지 못 한다"고 말했다.
- 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의 9개도, 40개 군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여름의 홍수와 겨울의 혹독한 추위,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해 6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힐러리, MB에게 남북대화 제안"(4/25)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방한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앞서 남북 수석대표 회담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재촉했다는 것임.
- 이 신문은 클린턴 장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전제했지만 "북한의 성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타진했다고 전했음.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는 만날 수 없다"며 6자회담 예비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클린턴 장관이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일련의 무력도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신문은 적었음.

● 한미, 대북억지력 제고·北문제 공조 확인(4/27)

-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에서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데릭 미첼 국방부 아태차관보 대리와 회의를 하고 대북정책, 한미동맹, 국제적 현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군사·안보 대비태세 강화조치를 점검·평가한 뒤 앞으로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재배치 등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전략동맹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기로 했음.
- 양측은 일본 지진 피해복구에 대한 한미의 노력을 평가하고 원자력 안전문제를 포함해 재해·재난 사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음. 또 아프가니스탄, 해상안보, 비확산 등 다른 지역,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기로 했음.
- 이와 별도로 김 차관보와 캠벨 차관보는 한미 차관보 전략대화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강화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했음.

- 양측은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한·미, 외무공무원 인사교류 MOU 체결(4/27)

- 한미 양국은 26일 외무공무원 상호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한미 외교·국방(2+2) 차관보급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윌리엄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과 함께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번 인사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 측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프로그램은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각각 직원 1명을 연락관 자격으로 상대측에 최장 1년간 임시 파견하는 것으로,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합의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외교부는 가급적 젊은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선발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께 미 국무부에 파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국무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라고 설명했다.
-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양국 외교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급 현안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창구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과거 일본 정부와도 1개월 단위로 직원 상호파견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며 "이를 부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美, FTA 의회 비준 힘써 달라"(4/27)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과 하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양국 국민과 기업이 속히 누릴 수 있도록 미 의회 내 조속한 비준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예방한 로크 장관과 미 하원의 짐 맥더모트, 조지프 크롤리, 찰스 랭글(이상 민주), 데이브 라이커트(공화)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마무리 단계까지 진전됐음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 이에 대해 로크 장관은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 등을 통해 미 의회에 한미 FTA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로크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측의 비준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통령과 로크 상무장관은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4/28)**

-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의결했음. 정부는 다음 달까지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후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음.
- 김 총리는 회의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한치의 오류가 없는 상태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음.

● **李대통령, 美CSIS 대표단 접견(4/29)**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방한했고 게리 로크 상무장관도 와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좋은 합의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존 햄리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끝나면 또 방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는 6월 비준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접견에는 제임스 존스 이사, 리처드 아미티지 이사, 빅터 차 한국실장, 마이클 그린 일본 담당 선임연구원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이혁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우다웨이 '3박4일' 행보 주목〉(4/27)**

- 26일 한국에 온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서울 체류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우다웨이 대표는 2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임. 이전의 방한 기간이 통상 2박3일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3박4일 일정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옴.
- 우다웨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2분께 중화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오후 5시께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함. 두 사람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약 2시간 동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뒤 시내 모처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했음. 4~5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음.



- 우다웨이 대표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시내 모처의 숙소로 이동해 여독을 풀고 27일 오전에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예방함. 27일에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만남도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끄.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해 12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논란 이후 처음이라 이번 회동을 통해 불편했던 기억을 털어낼지 관심을 끄.
- 당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천 수석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우 대표를 "중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이고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했음. 그러나 두 사람이 이번에 만나면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개인적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시각임.
- 우다웨이 대표는 천 수석 예방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은 29일임. 그러나 우 대표가 출국 전까지 서울에서 어떤 비공식 일정을 소화할 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다만 우 대표는 28일께 과거 주한 중국대사를 지내면서 친분관계를 맺어온 국내 정계 및 경제계, 학계 인사들과 사적인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중진의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국내 고위인사들과 골프 회동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음.
- 외교부 관계자는 "우다웨이 대표는 과거 주한 중국대사를 지내 국내에 지인이 많아서 개인적인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28, 29일 일정에 대해서는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특허청 "전통식품명칭 등 상표협력 강화"(4/25)

- 특허청은 지난 21~22일 일본 도쿄에서 '제8회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열어 국내 전통식품의 명칭, 지리적표시 등 상표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음. 특히 미국-유럽-일본 중심의 '3개 특허청 글로벌 협력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음.
-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국내 지리적표시 상표 205개와 일본의 지역단체 상표 465개의 명단을 교환, 향후 상표심사에 활용키로 했음. 3개 특허청 글로벌 협력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본 특허청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음.
- 앞서 한국 특허청은 유럽상표청(OHIM)으로부터도 이 협력체제 참여에 긍정적인 지지를 확인했으며, 내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국제상표협회(INTA)'에서도 같은 의제를 다룰 계획임.
- 특허청 박성준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 목록에 우리나라 전통식품 명칭을 포함시켜 외국에서 상표로 선점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차기 제9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는 내년 4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임.



● 한일도서협정 日중의원 본회의 통과(4/28)

-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의 한국도서를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이 28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비준됐음.
- 일본 중의원은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기립 다수 찬성으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음.
-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이 가결됨으로써 사실상 일본 국회의 비준이 종료됐음. 내달 중순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됨.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참의원에서 한일도서협정의 비준 절차가 종료되면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에 보관된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천205책에 대한 반환 절차를 시작함.
- 우리 문화재청은 일본 국회의 도서협정 비준이 종료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파견해 일본 측과 공동으로 도서를 최종 확인하고 반환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다음 달 하순께,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도서의 인도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 양국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음.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작년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일본의 통치기간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까운 시일에 인도 하겠다"고 약속했음.
-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가 열린 요코하마(横浜)에서 한일도서협정을 맺었고,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이번 정기국회로 넘겼음.

● 조선왕실의궤 이르면 다음 달 조국에 귀환(4/28)

- 조선왕실의궤가 일본에 강탈당한지 89년 만에 이르면 다음 달 조국의 품에 안김. 일본 중의원은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1천205책을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기립 다수 찬성으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음.
-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고다이로 다다마사(小平忠正) 외무위원장(민주당)의 한일도서협정 경과보고에 이어 곧바로 요코미치 다카히로(横路孝弘) 의장이 기립 표결을 선언했음. 당론으로 반대한 자민당 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요코미치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음.



-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이 가결됨으로써 사실상 일본 국회의 비준이 종료됐음. 내달 18일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됨.
- 조선총독부가 1922년 강탈·반출해 일본 궁내청에 보관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궤가 반환되면 89년 만에 조국에 귀환하는 것임.
-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도서협정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교류를 비롯한 양국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 日외상 "일한도서협정 30일 이내 비준될 것"(4/28)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외무성을 방문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한일도서협정이) 일본 헌법상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비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 일본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조약의 경우 참의원(상원)이 부결해도 중의원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참의원이 심의하지 않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발효된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됨.
- 마쓰모토 외상은 이어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인 일본 도서에 대한 접근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의 독도 해양과학기지·방파제 건설에 대해 항의했다.
- 이에 권 대사는 도서협정 비준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강화되고, 양국 간 문화교류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일본 측이 한국 원전 전문가의 일본 파견에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권 대사는 그러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마쓰모토 대신과 권 대사는 내달 21~22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日환경차관 "오염수 방출 못 알린 것 韓에 사과"(4/29)

- 곤도 쇼이치(近藤昭一) 일본 환경성 차관은 29일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해 한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긴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에 참석한 곤도 차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농도가 높은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사능 농도가 낮은 오염수를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곤도 차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전사고에 침착하게 대처해 큰 피해가 나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 피해를 끼친 것에 사과와 동시에 이해를 구한다"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뒀물과 대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행히 전보다 방사능 농



- 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 곤도 차관은 또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피해에 대한 한국의 위로에 대해 "한국민의 많은 지원과 위로에 감사 한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용기를 줬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음.
- 그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새로운 오염이 과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분리해 수거해야 한다. 유해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성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곤도 차관은 공동 합의문 발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난 극복 경험과 정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3국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일본산 음식과 공업제품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과 중국에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들 "日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 돌입"(4/29)

- 국내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가 검정·발표된 것에 대해 일본 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기로 했음.
- 국내 역사·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지난 28일 교토부 교육위원회와 교토시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관련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불채택 운동을 벌이겠다"고 29일 밝혔음.
- 이 단체가 교토부와 교토시를 대상으로 먼저 불채택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이 지역이 작년 12월 자민당 의원이 제출한 신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는 교과서를 각 학교가 쓰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임.
- 이 단체는 또 "이번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은 일본 내 8개 시민단체 모임인 '교토어린이와 교과서를 생각하는 연학회' 회원들과도 공조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의 본격적인 교과서 채택이 이뤄지는 7~8월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라. 미·중 관계

● 美中, 내달 초 제3차 전략경제대화 개최(4/26)

- 미국과 중국 정부는 다음달 9~10일 워싱턴 D.C.에서 제3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한다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25일 밝혔음.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각각 참석할 예정임.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와 무역불균형 등 경제 현안을 비롯해 정치와 외교 이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대북 식량지원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됨.
- 이 회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합의에 따라 기존의 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09년 7월 워싱턴 D.C.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베이징(北京)에서 2차 회의가 열렸음.

● 미·중 인권대화 베이징서 오늘 개막(4/27)

- 미국과 중국 간 '인권대화(human rights talks)'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됐음. 이틀간 열리는 인권대회는 지난 2002년 첫 개최된 이래 2008년,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임. 미국 측에서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측에서 천취(陳旭) 외교부 국제국장인 수석대표로 참석함.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이 인권과 관련해 새로운 발전방안과 유엔에서의 인권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특히 "인권 이슈와 관련된 양측의 이견은 평등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대화를 통해 이해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 한다"고 선을 그었음.
- 미중 인권대화의 의제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측은 중국 당국의 반체제 인사 탄압과 종교·집회·표현의 자유 억압, 일부 인사들에 대한 자유 제한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됨.

● 中천빙더 총참모장 내달 방미(4/27)

- 중국 인민해방군 천빙더(陳炳德) 총참모장이 내달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고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가 27일 보도했음.
- 천 총참모장은 26일 릭 라슨 의원이 이끄는 미국 상원의 '미중 실무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의 초청을 받아 다음 달 미국을 방문 한다"며 "나는 미국의 정치, 군 지도자들과 함께 양국 군사 사이의 관계 및 기타 공통 관심사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중국은 작년 1월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양국 간 군사교류 중단을 선언하면서 당시 예정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과 천 총참모장의 방미 계획을 모두 연기 또는 취소시켰음.



- 따라서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에 이어 천 총참모장이 미국을 방문 하면 양국의 군사교류가 완전히 정상화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임.
- 천 총참모장은 그러나 라슨 의원 일행에게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양국의 군사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현재의 국제전략 정세, 새로운 중미관계, 양안 관계에서 모두 역사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미국이 실질적 조치를 해 이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음.

● 미·중 인권대화 이틀째.. 날선 공방(4/28)

- 미국과 중국 간 '인권대화(human rights talks)'가 이틀째 회의가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음. 지난 2002년 첫 개최된 이래 2008년,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 중임. 미국 측은 이날 회담 폐막 후 그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음. 중국 측도 인권대화와 관련해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측에서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측에서 천쉬(陳旭) 외교부 국제국장인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중국의 종교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반체제 인사 탄압 등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 측은 특히 지난 2월 중국 내 '재스민 시위' 움직임이 일자 중국 당국이 관련 민주화 운동가, 인권변호사, 예술가 등을 체포, 구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서 그런 야만적인 인권탄압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은 공격을 펴고 있으나 중국 역시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요 의제로는 중국 당국이 구금중인 반체제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노벨상수상자인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 석방문제, 중국 내 기독교 교회 탄압, 티베트 사찰 시위 강경진압 등이 오르는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은 미국의 이런 공격에 인권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치면서 "미국은 스스로의 인권상황을 먼저 돌봐야 할 것"이라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음.

● 美 상원, 對中 환율보복 입법 재시동 조짐(4/29)

- 중국에 대한 환율 보복 입법을 주도해온 찰스 슈머 미국 상원의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각) "입법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욱 확신 한다"고 말했다.
-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 등을 만나고 온 슈머는 이날 워싱턴 성명에서 "중국이 인플레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위안 가치를 지금보다 대폭 올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면서 "위안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데도 지난주(베이징에서 만난) 저우 행장은 '지금의 수준이 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본인은 미 의회가 (환율 보복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슈머는 지적했다. 슈머의 환율 보복 입법 재시동 경고는 내달 9-10일 워싱턴에서 미중 3차 전략경제대화가 열리는 것을 앞두고 나왔음.
-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중국에서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각각 참석해 환율과 두 나라 무역을 비롯한 폭넓은 현안을 다룸.

● 中, 미국의 인권 비난 직접 반박(4/29)

- 중국 외교부는 29일 중국인권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가장 큰 사람은 중국인뿐이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비난을 반박했음.
- 외교부는 이날 자체 웹 사이트에 올린 '중·미 베이징 인권대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은 이번 중·미 인권대화에서 중국이 민생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 민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추진상황 등을 소개하고 중국인권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고 자격자는 중국 인민이라는 점을 표시했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또 평등과 상호존중의 정신에 근거해야 인권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했음.
- 베이징에서 27-28일 이틀간 열린 미중 인권대화는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구속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이견만 노출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막을 내렸음. 미국 측은 아이웨이웨이의 구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와의 면담을 요구했음.
- 미국 측은 또 텅 바오 등 수많은 인권변호사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구금, 티베트와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 종교의 자유 제한 등 민감한 문제들을 거론했으나 중국 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중국 인권이 심각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권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고 자격자는 중국 인민이라며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임. 실제로 중국은 서방의 인권압력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방측의 문제제기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 한편 차이나 테이리는 29일자 기사에서 영국 주재 중국대사의 서한을 싣고 아이웨이웨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음.
- 주영국 중국대사는 이 서한에서 "아이웨이웨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문제도 아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한 행위는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음.



● 中, '美 비자발급 제한' 부인(4/30)

- 중국은 미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의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 홍레이는 "중국과 미국은 정례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현재 제한을 한 다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 타임스 등 일부 외신들은 중국이 미국 외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중국인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 후진타오, 오바마에 토네이도 피해 위로전문(5/0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미국의 토네이도 피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일 보도했다.
- 후 주석은 전문에서 토네이도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해 위로 하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시했다.

마. 마일 관계

● "日, 후텐마 대체기지 활주로 V자형 결론"(4/29)

- 일본 정부가 후텐마(普天間) 미 해병대 비행장의 대체 기지 활주로를 미국이 요구한 대로 'V'자형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내달 7일 오키나와(沖繩)현을 방문해 이 같은 결론을 설명할 방침임. 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현 밖으로 옮기길 원하는 오키나와현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 일본은 6월까지의 미·일 안전보장협의회(2+2 회의)를 열어 활주로의 모양과 공법을 결론 낼 방침임. V자형 활주로는 자민당 정권 시대인 2006년에 미·일 양국과 나고(名護)시가 합의한 방안임. 착륙과 이륙 모두 해상을 이용하고 부근 마을 상공을 지나는 걸 피할 수 있지만, 바다 매립 면적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음.
-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정부는 오키나와 현 밖으로 기지를 옮기길 원했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는 미·일 합의안대로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邊野古)로 옮기는 대신, 활주로는 2개가 아니라 1개를 'T'자형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하지만 미국이 V자형을 고집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대신 오키나와 가테나(嘉手納) 기지 남쪽의 미군기지 시설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美, 日 정권 불안에 동맹심화 소극적"(5/1)

- 미국이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의 불안정 때문에 일본과 적극적인 동맹 심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음.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했음.
-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對) 중국 정책 등에서 일본과 공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현안인 간 총리의 6월 방미와 양국 외무·국방장관 회담,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 발언이 없었음.
- 간 총리는 6월 하순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담 후 사임할지도 모를 간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차선책으로 5월 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미일 공동선언은 가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지구적 과제를 추진할 파트너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권 기반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간 정권과 당분간 거리를 둘 것으로 보임.
- 요미우리신문은 클린턴 장관이 마쓰모토 외상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회견 후 악수도 없이 퇴장했다고 전했다.
- 최근 6월 말 사임이 결정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예정됐던 마쓰모토 외상과의 회담을 취소했음. 결국 마쓰모토 외상의 약 10시간에 걸친 워싱턴 방문은 주요 현안에 대한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음. 이에 대해 국회 일정을 우선해 마쓰모토 외상의 방미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한 간부는 "이 정도 성과라면 차라리 (마쓰모토 외상이 미국에)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바. 중일 관계

● "中 원자바오, 내달 방일시 재해지역 방문 검토"(4/29)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내달 21, 22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중일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지금까지 재해 지역을 직접 찾은 것은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뿐임.
- 원자바오 총리의 방문이 실현되면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 선박 충돌사건으로 나빠진 중일 양국의 감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방문지는 중국이 구조대를 파견했던 이와테(岩手)현 오후나토(大船渡)시나 피난민들이 머무는 도치기현 등이 검토되고 있음. 다만 경비나 일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재해 지역을 가지 않고, 도쿄 시내에서 이재민을 위로하는 강연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 기 타

● 日방위상 "중에 맞서 한미일 관계 강화 필요"(4/25)

-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맞서기 위해 한국,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기타자와 방위상은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대중(對中) 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이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타자와 방위상은 이어 최근 지진 피해복구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매우 굳건해졌다고 앞으로 양국 관계 강화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까지 미일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적이 없으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쏟아 부은 노력의 결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강진피해 복구에 따른 부담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앞서 미국은 지난달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직후 1만3천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지원활동을 벌이는 한편 해병대 산하 생화학사고대응전담반(CBIRF)을 현장에 급파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대응에 나섰다.
- 한편, 전문가들은 기타자와 방위상이 내달 오키나와(沖縄)를 방문해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6월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안에 미일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中·러 순회 무비자여행 첫 합의(4/27)

-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을 순회하는 무비자 여행이 첫 실현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훈춘산장(琿春三疆)국제여행사가 인솔하는 21명의 단체여행객이 26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을 출발해 무비자로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하고 다음달 4일 창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 여행 일정은 러시아의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토크, 카산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북한 라선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는 3국이 모두 허가한 시범사업이라면서 이 여행상품 판매가 곧 본격화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 훈춘산장국제여행사 측은 매주 수요일에 3국 순회 무비자 여행이 실시된다고 확인하면서 신분증과 여권 복사본을 보내면 수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온 중국인의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져 북·중, 중·러, 북·중·러 3국 경협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중국·러시아 3국을 순회하는 무비자 여행 논의는 지난해 3월 훈춘시가 제안해 중국의 관할당국인 국가여유국이 허가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이에 동의하면서 성사됐음.
- 북한 라선시 관광국의 임강호 부국장은 신화통신에 "조선은 (이 여행상품의) 순조로운 시작과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 3국 여행상품이 동북아지역의 명품 관광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우호의 상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지린성 여유국의 차이위에링(蔡躍聲) 부국장은 "접경지역 훈춘의 독특한 위치로 볼 때 중-러-북을 잇는 관광 노선은 최상급의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지린대학의 이바우중(衣保中)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 무비자 여행은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 국가 간에 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동북아 3국에서 관광이 활성화하려면 정치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도로, 항만 등의 기초 시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화통신은 "동북아 지역에서 지난 10년 새 국제여행 연평균 증가율이 7.7%정도에 달했다"며 3국 순회 무비자 여행상품도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음.

● 韓中日 환경장관, 양자회담서 협력 논의(4/28)

-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한국·중국·일본 환경장관이 28일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환경 분야 현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저우성셴(周生賢)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 콘도 쇼이치(近藤昭一) 일본 환경성 차관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차례로 한-중, 한-일, 중-일 회담을 가졌음.
- 이만의 장관은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생물다양성과 물 산업 등에서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18) 당사국 총회 유치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한국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음.
- 특히 일본과의 회담에서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일본이 사태를 잘 수습하기를 기원 한다"고 일본 측에 말했음. 이에 콘도 차관은 "한국의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답했음.
- 이 장관은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전사고 수습 경험을 다른 나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환경부 관계자가 전했다.
- 이 장관은 또 중국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탄소배출 감축방안 등 환경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이어 일본과 중국도 회담을 가졌음.



- 이에 앞서 오전에는 3국의 대학생과 산업계 대표 30명이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을 열고 '캠퍼스 온실가스 배출과 저탄소 그린 캠퍼스 구축방안'과 '환경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음. 결과는 3국 장관회의에 보고됨.
- 3국 장관들은 29일 오전에 본회의를 갖고 각국의 환경정책과 전 지구·동북아시아 차원의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함.
- 이들은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황사, 폐기물 등 전 세계적 환경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도 채택함.
- 일본 대지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재난으로 인한 환경 피해 예방과 극복을 위해 3국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될 예정임.

● 韓中日 환경장관 재난협력 합의문 채택(4/29)

- 한국과 중국·일본이 29일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재난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문을 채택함. 일본 대지진 이후 한중일 3국이 재난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이번이 처음임.
-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저우성셴(周生賢)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 콘도 쇼이치(近藤昭一) 일본 환경성 차관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3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본회담을 열 예정임.
-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일 각국이 환경 정책과 지구·동북아시아 차원의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자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함. 이를 통해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황사, 폐기물 등 세계적 환경 문제와 동북아의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임.
-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10대 우선 협력분야 공동 행동계획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함. 이에 앞서 3국 장관은 28일 한-중, 한-일, 중-일간 양자 회담을 차례로 갖고 해당국 간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한중일 3국의 대학생과 산업계 대표 30명은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을 열고 '캠퍼스 온실가스 배출과 저탄소 그린 캠퍼스 구축방안'과 '환경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음. 이어 저녁에는 부산시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이 열렸음.
- 이번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담은 29일 오후 공동 합의문 발표와 낙동강하구언 환경시설 시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침.